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64
----------	------

제출연월일 : 2018. 9. .

제 출 자 :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기본방향, 정의, 공동이용시설(안 제1조~제4조)
-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수당(안 제6조~제7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위탁 및 업무(안 제10조~제12조)
- 라. 주민협의체의 설립,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5조~제16조)
- 마.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안 제19조)
- 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의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 제10조, 제15조제2호,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9.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도시재생은 구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 포용 도시로의 발전을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6. 생활밀착 도시 및 스마트 포용 미래 도시 추구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6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수당) ①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

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 재임명하거나 재위촉할 수 없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3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

다.

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
 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
 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③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의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

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17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
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
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
등에게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이용시설의 수익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 수익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기타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구청장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3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4. 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수당 (조례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 없음

4. 작성자

- 성동구 도시재생과 안영선 (연락처 2286-6622)

< 관 계 법 규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 략)

7.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8.~9. (생 략)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
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
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2조제10호나
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
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
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관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25명 이상 30명 이내
2.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20명 이상 25명 이내
3. 제2호에 따른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 또는 구: 15명 이상 25명 이내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

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 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⑩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19. 생략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혁신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 3. 17.>

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나.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라.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3. 17.>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바. ‘중간지원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 ‘사회혁신기업 등’이란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 3.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2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18. 9. 21. /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8. 9. 27.

다. 상정일자: 2018. 10. 23.

(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나.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본방향, 정의, 공동이용시설(안 제1조~제4조)

나.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수당(안 제6조~제7조)

-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위탁 및 업무(안 제10조~제12조)
- 라. 주민협의체의 설립, 사업추진협의회(안 제15조~제16조)
- 마.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안 제19조)
- 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의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 제10조, 제15조제2호, 제39조제1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8. 8. 9. ~ 8.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기본방향,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 ~ 제7조에서는

-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임기 및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 제12조에서는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위탁 및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 제16조에서는

- 주민협의체의 설립,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통합개념으로,

- 그동안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 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주체간 상호 역할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제정조례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 수익의 방법으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법령과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기준에 의한 허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와 엄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의 경우 공공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 목적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